

전통시장 1km 내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준·대규모 상가 허용가능한 '시장' 등으로 잘못 표기돼 민원 발생
광주시 전국 첫 시스템 구축...재산권 피해 방지·골목상권 보호 기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지역에 대형마트는 물론 준·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 재산권 피해 방지는 물론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등이 기대된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통시장업보존구역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시스템을 정비했다. 전통시장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지역으로,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직영 또는 체인점 형태를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제한되는 곳이다.

시장, 송정시장 등 전통시장 인근 30여개 구역 100km²가 전통시장업보존구역에 해당된다. 그동안 광주지역 전통시장업보존구역은 준·대규모 점포 입점이 가능한 국토계획법 내 '시장' 등으로 잘못 표시되거나,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준·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재산권 피해는 물론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해 10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전통시장업보존구역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명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든 데 이어 11월에는 중앙부처에 전통시장업보존구역 분류명칭 신설 및 자치구 토지이용계획 정비 등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들어 전통시장업보존구역 명시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도 최종 완료했다. 광주지역 전통시장업보존구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자치구 전통시장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이번 전통시장업보존구역 시스템 정비 사업은 지난해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제안심사에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명시방안 개선' 사례로 선정돼 은상(우수제안)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남균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시민 누구나 전통시장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재산권 보호는 물론 전통시장 인근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방사광가속기 유치 기원 예불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30일 구례 화염사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코로나 극복 및 방사광가속기 유치기원예불에 참석, 육백의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순호 구례군수, 김영록 지사, 소병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서동용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민주당 광주 서구를 양향자

“광주 경제 생태계 바꿀 기회 만들 것”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 조성
삼성전자 전장사업 등 유치
군공항·탄약고 이전 꼭 해결
세대교체 호남정치 복원 주력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광주의 경제 생태를 바꾸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4·15 총선 광주 서구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30일 삼성전자 상무 출신답게 '경제'를 의정 활동의 화두로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국가 간의 단절이 늘면서 글로벌 공장이 멈추고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었다고 진단했다.

양 당선인은 "4차산업혁명과 인구절벽으로 고용과 세수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기존의 문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며 "광주 경제 생태계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 대기업도 유치하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경제의 해답으로 자동차를 꺼내 들었다. 양 당선인은 "광주에 미래차 R&D부터 완성차 제조업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도 여기에 달려 있다"면서 "매년 AI(인공지능) 고급인력 200명이 배출될 GIST 대학원과 에너지 관련 우수 인력을 배출할 한전공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을 무수히 배출할 연구원과 종합대학도 광주전

남에 많다"고 진단했다.

또 "이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미래자동차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래차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전장사업과 삼성SDI 배터리 분야 유치도 약속했다. 양 당선인은 "이 같은 약속은 단순한 말의 성찬이 아니며, 지난 4년간 협의해온 추진의 흔적이 있다"며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된 지금 반드시 성사시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5·18 관련법 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양 당선인은 "광주의 슬픔과 민족의 아픔을 정치적·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에 힘을 쏟겠다"며 "정책의 미비로 민족의 정기를 흐리고, 역사를 훼손하는 일

이 계속되어선 안 되며, 정치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호남정치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양 당선인은 "누가 뭐래도 집권 여당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은 호남이다.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없다. 만약 호남정치의 복원이 '집권당인 민주당을 움직이고 이끄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호남 28개 의석 중 27개를 민주당이 석권했다. 정부와 여당을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갖춘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 또한 호남정치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호남정치는 구태정치와 이별하고 세대교체에 성공했다. 가공할만한 인적 혁신이 이뤄진 것이다"면서 "이 힘으로 호남정치는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 사업이 군공항 이전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양 당선인은 "군공항 및 탄약고 이전이 가장 급선무다. 앞으로 있을 4년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오랫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지역 개발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면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장들을 만나겠다.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만들고 국방부 장관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공항과 탄약고 이전사업은 여당인 민주당이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광주 군공항 및 탄약고 이전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만 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코로나19 농촌인력 부족 일손 돕는다

전남도는 모내기 등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5월부터 2개월간 봄철 농촌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는 등 농촌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각계 단체가 참여한 일손돕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농작업이 어려운 농가를 비롯 홀로 사는 농가, 장애·고령농가 등 농작업 일손이 취약한 계층이

며, 양파·마늘·매실 수확 작업과 과실 수기, 봉지 쓰이기 등 기계화가 어려운 농작업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본청과 사업소, 시·군 전 직원이 1회 이상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추진 기간 동안 전남도와 시군에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군부대와 각급 기관단체에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

안,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도·농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마늘·양파 등 농산물 사주기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한다. 광흥섭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봄철 농번기에는 모내기와 마늘·양파 수확 등 다양한 농작업이 일시에 집중돼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며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농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농번기 일손 돕기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법, 4년 '태양광 소송' 광주시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출자자 한 곳 부정당 업자 이유로 우선협상 배제 결정 위법 없어”

4년여 동안 법정다툼이 진행됐던 광주시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 선정 관련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사업 재개까지 시간은 더 필요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9일 주식회사 녹색 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에서 광주시, 항소심에서 녹색 친환경에너지가 승소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시 광주시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광주시 민간 투자사업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녹색 친환경에너지가 출자자 한 곳이 부정당 업자라는 이유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배제된 결정에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부정당 업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광주시의 행정이 적법했다고 본 것이다. 이 사업은 2014년 5월 국무조정실 산하 녹색성장지원단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2016년 착공, 2018년 완공 예정이었다. 매립이 끝난 27만7300여㎡ 쓰레기 매립장에 220억원(민자 22억원, 용자 198억원)을 들여 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